

!육·유이교육 정책, 정부에 바란다

2022. 4. 28.(목),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육·유이교육 정책, 정부에 바란다

2022. 4. 28.(목),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Program i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 일 시 | 2022. 4. 28(목), 14:00~16:00

I **장 소** I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일정표 |

시간	세부 내용
14:00	• 개회(참석자 소개) 사회: 박은정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아교육보육정책연구실
14:00~14:20	• 인사말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나성웅 원장 (한국보육진흥원)
14:20~15:50	• 지정토론 작장: 문무경 선임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이완정 교수 (한국아동학회장) 정정희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오필순 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조용남 국장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이중규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성순 회장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최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유희승 과장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15:50~16:0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6:00	• 폐회

Contents I

Ⅰ인 사 말ㅣ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1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3
나성웅 원장 (한국보육진흥원)	
│ 지 정 토 론 │	
이완정 교수 (한국아동학회장)	
정정희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장)	15
오필순 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19
조용남 국장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25
이중규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29
위성순 회장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33
최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37

43

- 45

유보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유희승 과장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보육·육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수고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님,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신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아 교육·보육 공약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적지 않은 투자와 관심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육아 비용부담이 가장 큰 나라이고, 그 원인으로 교육비와 보육비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어렵고 힘든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난 대선에서 영유아 공약의 핵심은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우겠다'는 기조 아래 세부내용을 정한 바 있습니다.

부모가 주양육자가 되고, 정부가 성실하고 충분한 보조양육자가 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해묵은 숙제인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초등전일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등돌봄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제공,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아동 1인당 보육면적 기준 확대 등 정책수요자인 아이의 입장에서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효과적으로 정책화되고, 내실 있는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듣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정책 제안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신 의견이 입법과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국회의원 **김 미 애**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와 국민의 힘 김미애 국회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 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구성과 준비로 여념이 없는 때에 귀한 발걸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행사를 공동주최해주신 김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축사를 해주실 한국 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자로 귀한 의견을 제시해주실 한국 아동학회장 이완정 교수님,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정정희 교수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 육진흥원 오필순 원장님, 한국보육진흥원 조용남 국장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님,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위성순 회장님,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박사님, 보건복지부 유보영 과장님, 교육부 유희승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사회와 좌장으로 진행을 맡아주실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은정, 문무경 두 박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젊은 세대와 양육자들은 여전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관련된지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출산율만 해도 2000년대 후 여러 정부를 걸쳐 1.2명대로

등락을 보였던 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내려가더니 계속 하락하여 작년 2021년에는 0.8명의 초저출산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출산과 육아에 대해 내린 국민들의 부정적인 전망의 산물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아이는 국가가 함께 키우고 육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과함께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강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초등돌봄 등의돌봄서비스 확대, 돌봄서비스의 통합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에 대한 친환경급식 제공, 시설과 환경의 개선 등 아동발달을 돕는 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선인의 약속이 효과적으로 정책화되고 집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유아교육 과 보육의 학계와 현장, 중앙정부와 지역, 교사와 연구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대거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윤석열 당선인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한국사회가 견지해야 할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방향성과 과제들을 활발 히 제안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하여 본 토론회가 새 정부의 힘찬 출발에 일조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장 나성웅입니다.

'유아교육·보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하는 2022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미애 의원님 과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

세대를 위한 국정과제 논의와 향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매년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하며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이 시기에 지속가능한 보육·육아 환경 확립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육정책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새정부의 '임신부터 육아까지 국가케어'와 유아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통한 영유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 십여 년간 '모든 영유아의 보편적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또한, 보육과 양육의 경계를 넘어선 보육서비스의 내실화와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통합 육아증진을 위해 앞장 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보육진흥원은 정부와 보육현장의 가교로써 새정부의 유아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제를 충실히 지원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정부부처 등 미래세대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신 만큼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오늘 펼쳐지는 다양한 논의들이 새정부 보육 정책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평등한 출발선 보장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하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28일 한국보육진흥원 원장 **나 성 웅**

|지정토론|

이완정 교수 (한국아동학회장)

정정희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오필순 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조용남 국장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이중규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위성순 회장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최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유보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유희승 과장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지정토론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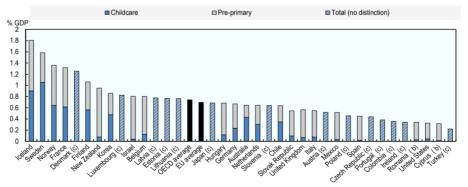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이완정 교수 (한국아동학회장)

Public spending on ECEC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돌봄과 보육·유아교육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별로 뚜렷한 변화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2003~2008)에서는 OECD의 권고에 따라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분야(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ECEC)에 GDP의 0.5%까지 재정 투자를 늘리고자 목표하였고, 이명박 정부(2008 ~ 2013)에서는 누리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2013~2017)에서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였고,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향한 국공립시설 설치 확대, 사회적 수요에 따른초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OECD1)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GDP의 1%에 가깝게 재정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합니다.

Chart PF3.1.A.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ublic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pre-primary education and total public expenditur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s a % of GDP, 2017 or latest availabl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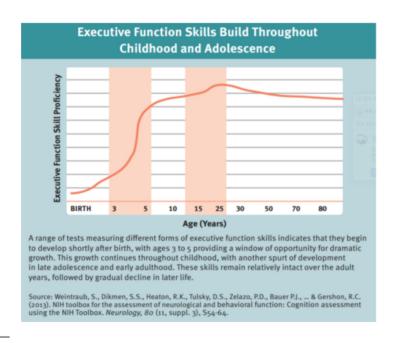


¹⁾ https://www.oecd.org/els/soc/PF3_1_Public_spending_on_childcare_and_early_education.pdf

Executive function throughout childhood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ECEC 정책은 영유아보육·유아교육의 질적 향상(Quality)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행되어왔으며, 이는 OECD의 ECEC정책에서 가장 강조되어 온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생애발달에서 영유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ECEC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지속적으로 견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2)이 순조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기, 초기 아동기까지 이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놀이 중심의 자유로운 탐색입니다. 이미 2019개정누리과정과 이에 따른 제4차 표준보육과정개 정은 영유아기 놀이중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행기능의 순조로운 발달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요소는 toxic stress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아동학대라 알려져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subgroup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동이 가계의 빈곤, 부모의실직, 적절한 훈육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 의한 아동학대와 방임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예방중심의 정책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²⁾ https://developingchild.harvard.edu/guide/a-guide-to-executive-function/

Why parenting matters

지난 20여 년간 아동의 삶과 가족의 요구가 변화하였다는 점을 정책과정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가 발간한 21세기 아동³)을 보면, 부모역할(parenting)의 세계적인 추세는 intensive parenting과 pubbing의 두 가지 양면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즉, 오늘날의 부모는 부모역할에 과도하게 몰입하지만 동시에 디지털기기에 빠져 자녀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등한시하는 모순을 보입니다. 영유아기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부모와의 협력이 파트너십 수준으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의 세 가지 축4, 즉 온정(warmth), 한계설정(structure), 자율성 지원(autonomy support)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과도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Horizontal transition

지난 20여 년간 영유아기 보육 및 유아교육이 전일제로 자리 잡으면서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비교적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이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과 생활에서의 이런 연속성 (continuity)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크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흔히 유·초연계의 연속성, 즉 수직적 전이(vertical transition)5)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정책적 관심을 두지만, 아동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루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다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 초등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는 것은 자녀의 「하루」가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평 전이(horizontal transition)과정의 예측성,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부모는 아동의 방과 후 시간을

³⁾ https://www.oecd.org/education/education-in-the-digital-age-1209166a-en.htm

⁴⁾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why-parenting-matters-for-children-in-the-21st-century_ 129a1a59-en

⁵⁾ https://www.oecd.org/publications/starting-strong-v-9789264276253-en.htm

학원 중심으로 보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초등 저학년 시기는 자유로운 놀이와 탐색을 중심으로 실행기능이 활발하게 발달해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학원 사교육 중심의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초등 저학년 시기의 올바른 교육과성장발달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불필요하게 초래하여 부모로 하여금 자녀양육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과도하게 느끼게 합니다.이런 요인들이 모두 저출산 기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국, 초등저학년의 방과후 돌봄 시간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조기 사교육이 시작되지만 이것이 종국에는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와 탐색 시간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배움의 과정은 하루를 통해 적절한 환경의 맥락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초등 교육과 돌봄으로 양분되어 있는 점, 돌봄의 인력, 내용과 방법이 초보적인 상황은 중장기적으로 아동의 실행기능 발달에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저학년의 경우 단순 돌봄이 아니라 방과후 보육의 틀로 정책적 재개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주, 스웨덴 등에서 방과후 보육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율이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고르게 높 은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M자 곡선을 이루다가 OECD 각국과 마찬가지로 평평한 직선을 이루어 야 하는 요구이에 직면해있습니다. 이는 아 동의 성장과 발달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 기조 극복과 긴밀히 닿아있는 지점이라 보입니다.

Conclusion

유보통합을 논의하면서 단순히 보육과 유아교육의 현황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변화한

⁶⁾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318010003747

아동과 가족의 삶, 달라진 필요와 요구를 따져보고, 우리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라는 시그널을 줄 것인가를 거시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토론 2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유아교육의 입장에서

정정희 교수 (한국유아교육학회장)

새로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서도 아이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처우개선, 단계적 유보통합추진, 초등전일제교육실시 및 초등 돌봄 8시까지 확대,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영유아 친환경 급식제공 및 영아반 교사아동비율 축소,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구축, 영유아 발달전문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파견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아교육 ·보육 공약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과 유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세계정세와 4차 산업사회,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과 기후문제, 저출산고령사회 등과 같은 사회현상은 영유아교육 보육 분야에도 깊이 영향을 미쳐 신속한 대용체계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는 현 시점은 이러한 최첨단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위해서는 영유아기교육부터 출발하여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장기적 차원에서의 국가 인적 자원 양성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시대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는가운데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본 개념을 설정하고 교육 분야의 공정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1.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위한 배경

- 새로운 정부에서 미래 영유아교육 체제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교육 ·보육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교육체제개편이 시급한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심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결혼과 육아에 관하 가치관 제고가 필요함
- 해외 선진국들도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교육과 보육 공공성 강화와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음
- 기후환경 변화, 코로나 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생태, 세계시민교육, 평화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 구축 필요성 증대됨
- 따라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아이 돌봄 서비스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교사아동비율축소, 친환경 급식제공, 아동학대 방지 등의 주요 공약들이 모두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나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먼저 이원화 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

2. 유아교육·보육 통합정책 추진배경 및 과제

- 영유아기 출발선 평등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의 실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함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점,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와 저출산 등의 현상으로 인해 영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적 특성의 공통점 확대와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추세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됨
-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 통합, 정보공시, 평가 지표 통합함

○ 그러나 아직까지 관리부처 이원화로 행정, 재정, 교사자격 측면에서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3. 유아교육·보육 통합정책 추진 방향

- 1) 영유아를 최우선으로 하는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한 영유아의 발달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함.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체계를 통합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영유아의 입장보다부모나 이 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
- 따라서 새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할 때 무엇보다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는 출발선 평등과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영유아를 중심 에 두 정책마련이 필요함

2) 교육부를 통합부처로 통합정책 추진

- OECD 국가들은 각 국가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교육과 보육이 함께 협력하여 하나의 관리체제 하에서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유보통합의 범위도 교육과정, 재정, 교사자격 통합 등 포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유보통합을 이룬 국가들은 대부분 교육부로 통합함으로써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유보통합에서도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의 대상인 0-5세를 모두 포함 한 포괄적인 차원에서의 영유아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교육부를 통합부처로 하여 법과 행정, 재정, 교사자격 등 구체적인 단계에까 지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정토론 3

유아의 행복을 위한 더하기 정책

오필순 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본문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률 감소와 노령화 사회 진입이 세계 1위로 손꼽히며 국가 차원에서 출생률 증가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교육, 양육의 어려움들이 더해져 아동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더 절실한 시기이다.

올해는 일제강점기 고난 속에서도 아동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삼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본연의 의미를 생각하며 어린이가 존중받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인 비차별의 원칙,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과 그 외 교육 받을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 놀 권리, 어린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어린의 권리 보호 및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를 위한 정부 및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입장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권자인 양육자의 입장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왔고, 오늘의 수많은 정책과 지원에 어린이 입장의 정책은 없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양육 및 돌봄 관련 정책의 결과에 어린이들은 정말 행복할까?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있을까?

이러한 관점으로 개인적 바램을 더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더하기

○ 놀권리 보장을 위한 생태적·미래적 차원의 유치원 공간 혁신

아이들의 제일 행복한 시간은 자유놀이 시간이다. 실내외공간에서 자유로운 놀이 시간이 좋은 이유는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유아기는 삶에 대한 이해와 가치, 실행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유아주도의 실천적 놀이를 통하여 유아가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와, 함, 삶을 통한 생태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속 놀이터 공간이 더 많이 조성되어 누구나 자연생태계의 선순환 속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누리며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연속의 놀이터가 차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닌 동네 곳곳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실내공간에 대한 혁신도 이루어져야 할 때인데 환경파괴로 인한 미세먼지, 공기오염으로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날들이 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내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더 많은 진짜 놀이터가 필요하다. 유아들에게 주어진 교실 공간은 아이들에게 너무 좁다. 유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실내와 바깥 모두 주어졌으면 좋겠다.

유치원 공간에 대한 미래 방향성도 담아야 할 때이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각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미래공간혁신 사업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생애 첫학교에서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맘껏 놀이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의 후지유치원처럼 자유로운 공간에서 자란 아이와 획일적 닫힌 공간에서 자란 어린이는 창의성, 주도성 등 발달적 여러측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한다.

○ 부모와 자녀 분리에서 함께 정책으로 더하기

저출생으로 국가적 위기의식을 느끼고 온 국민의 한 아이의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에 관심과 지원과 사랑으로 키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 아이가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생애 첫 3년은 정성어린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다양한 방법으로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높지 않다.

영유아 입장에서 본다면 가정 우선되어야 할 것은 행복한 영유아기를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과 안정적인 유대감이다. 지금까지의 각종 정책들이 외부 기관에 의한 돌봄으로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생애 첫 결정적 순간에서 부모와 유아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모와의 분리되면서 발생한 문제점과 비용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전환한 다면 행복한 영유아기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과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예방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확대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담당하고 있다. 돌봄과 보육의 확대가 부모와 유아가 떨어지는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단, 부모가 직접 아이를 양육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노동, 보건, 가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부모교육 더하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2년 이상 겪으면서 공동체의 가치와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다. 폴먼은 배워야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했다.

개개인이 다양성과 차이, 소통과 공감, 협력과 공존 등 핵심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할수 있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등 중요한 교육은 몸에 체득이 되어야 하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이다. 아동 생애 첫 선생님은 부모로서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는 누구나 쉽게 준비없이 다가와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재까지 좋은 부모되기를 위한 준비는 부족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과정까지 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이 개설되어야 하고 좋은부모되기를 위한 여러 단계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한 유치원에서는 등록 전에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크다고 한다. 이러한 유치원, 어린이집 등록전 부모교육, 결혼 직전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 되기 교육'을 관련 정책도 필요하다. 부모교육을 제도화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볼만 하다. 이러한 정책 실행에는 우선적으로 대상자입장에서의 필요, 요구, 애로점을 파악하고 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2. 행복한 유아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 더하기

○ 유아학교 명칭 변경

명칭은 대상의 본질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1차적 수단이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유아교육 본질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어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이다. 현재 의원발의 후 국회 계류 중인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유아교육을 유초중고의 학교 체계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부터 '유아학교'로 바로 잡아 학교급체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 업무부서 조정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유치원은 기본학제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 복지정책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등교육과의 교육과 정 연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력 회복 정책사업 등에서 유치원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치원을 학교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유초중등과 연계된 전반적 정책을 위한 업무조정이 교육부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마무리

그동안 유아교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정책,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을 시작으로 시도별 유아교육 5개년 발전방안 마련 등 정책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숙원과제는 남아있다. 대표적으로는 유보통 합과 유아 무상의무교육 실현이다.

새정부의 공약에 유아교육의 현안문제를 다양하게 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에 있다고 본다.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양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무상 의무교육의 실현으로 유아가 행복해서 학부모가 더 체감하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정책을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주길기대해본다.

지정토론 4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정부에 바란다〉 토론

조용남 국장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 22년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새 정부는 선거기간 中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표방하며, 보육·유아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

우리아이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초등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I 플랫폼 구축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파견
엄마아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기간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보육·유아교육 정책환경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저출생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돌봄 공백, 영유아 발달의 한계, 첨단 미디어와 Digital 환경 변화 등 극복해야 할 현안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특히, 올해(2022년)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된 지 2년차가 되는 해이며,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로, 새 정부의 출범은 향후 보육·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또한, 지금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과 함께 코로나 19 팬데믹이 겹치면서, '첨단 과학기술(AR, VR, AI 등 첨단 미디어 및 기기) 활용의 일상화'를 경험하는 세대로, '상상하는 것이 곧 현실이 되는 세계'를 살아내야 할 미래세대입니다.
- 더구나,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시행 31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100년간의 아동보육·유아교육 역사 및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반 여건을 반영하여, 오늘의 논의가 향후 추진될 '새 정부의 보육·유아 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더욱 풍부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모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임신→산모(태아)→(영유아)아동기'까지,'생애주기별 촘촘한 '질'적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 필요

- 새 정부의 공약을 보면, 임신(난임 포함)부터 산모, 태아, 영유아, 아동기까지 건강한 성장을 위한 치료비 지원, 영유아 단계별 발달 점검 및 지원 등 ①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지원, ②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양육자의 경제적 지원(부모급여), 시간적 지원(육아휴직 등), ③양육 역량 지원(부모역량지원, 산후조리원 등) 등으로 단계별 지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원체계는 임신-출산-육아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매우 바람 직한 정책설계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u>단계별</u>· 개인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 수준 또한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 '정책모니터링-환류 체계'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합니다.
- 또한, 보육·유아교육정책 당사자는 '영유아' '부모(양육자)' '교직원' '지역사회'로 각각의 자리에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역할과 기능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핵심인 '사람 중심의 서비스 공공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처우, 보상, 관리·감독이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합니다.
- 아동돌봄서비스 또한 만0세~만2세, 만3세~만5세, 초등(만6세 이상)까지,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①부모 자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②돌봄서비스 통합 AI플랫폼 구축을 통한 접근성 강화, ③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연계 및 프로그램 다양화등의 제시를 통해 아동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 단, 이러한 정책 설계 구조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돌봄운영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책임,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주체이며,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체계 사이의 '칸막이행정'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친환경급식, 환경개선, 영유아 발달전문가 파견, 다문화가정 자녀 등 보육·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제시
 - → '영유아'중심 관점, 지역별 특성 및 여건 반영한 일관된 정책추진 필요
- 2013년 0~5세 무상보육 실시, 보육·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추진을 통해, 보육·유아교육 현장은 '밝고 행복한 미래세대 양육'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수요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친환경 급식 제공, 환경개선'을 넘어, 영유아정서 발달 점검 및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전문가 파견 등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지원은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해 '영유아' 중심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입니다.
 - 단, 이러한 개별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사회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보육과 유아교육'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 특수시책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예산의 규모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및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외 (영아반) 교사대 아동비율이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 구축 등은 초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해서도 '영유아 중심'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을 통해 '더 이상 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통한 단계적 유보통합'은 지난한 논의가 지속된 사안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유아교육 정책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정책으로, 늘 언제나 "영유아" 중심의 관점을 견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0~5세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실현

이중규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토론에 앞서 5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하며, 초저출산 시대에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한 평등한 출발선을 만들어 주는 공정과 상식이 있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

논에서 벼를 잘 자라게 하려면 좋은 못자리(nursery stage)는 성공의 필수 조건이며 초기에 잘 준비해야 한다. 영유아에게 보육과 교육은 삶의 묘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심리적 성장과 함께 지적 능력, 언어 구사 능력, 인내심, 사회성 등 거의 모든 인간의 능력과 속성이 영유아기에 새싹처럼 형성된다. 보육과 교육은 영유아에게 그들이 가진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부모는 소중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태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에게 뱃속부터 정서·발달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낳고 자란 아이들과 함께 최근 취학 전 교육을 받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외에도 문화센터,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보육과 교육 시설,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속에서 양육자의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이 영유아의 이용기관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불평등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형성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지만 수행하는 기능은 유사해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으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며 보육기능을 추가하면서 경계가 모호해졌다. 이에 더하여 3-5세 유아의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 - 누리과정'이 운영되면서 더욱 유사해졌다.

영유아들은 보육과 교육을 구분하지 않는데 성인들은 각자의 이익을 확보,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보육과 교육을 애써 구분하고 있다.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공통의목적을 가진 두 기관의 분리된 체계는 행정적 관리·감독 및 재정투자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위해 유보통합을 조속히 이루어 일관되고 전문적인 국가 차원의 교육과 보호를 제공해야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당선인은 만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토론자는 당선인의 약속대로 출생 이후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이루고 평등한 출발선 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중장기 유아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해 실시한 대국민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의 통합을 찬성했고, 본 연합회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던 온라인 설문에서도 응답자 중 약 90%인 2만4천여명이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여러 학회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보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 영유아를 지도하는 다양한 학계에서도 유보통합의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현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공 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양육자가 어느 기관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교육 환경의 격차 속에 있다. 양육자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돌봄시간 등 각각 다르게 나누어진 정책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새 정부에서는 개인의 양육환경에 맞는 어떤 기관을 선택하든지 아이들에게 공통의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어찌 보면 당연히 교육을 주도하는 교육부에서 통합을 이루어내길 기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제도적 차이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새 정부는 우선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와 어린이집·유치원의 현장 관계자, 학계, 양육자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당선인의 공약대로 단계적 유보통합을 시작한다면 그 첫 단계는 부처통합을 1순위로 시행하여 해당 부처에서 법안, 재정지원, 시설기준부터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적 추진이라도 여러 부처에서 나누어 추진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담당부처에서 책임지고 추진하여 실행하는 것이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정의란 공정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진정한 공정은 공평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출발선이 다른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겠는가? 불평등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공정을 말하는 것은 불공정한 현실을 가리려는 위선에 불과하다. 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의 논의 중심에 영유아를 두고 진정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한 첫 출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며 기대해본다.

유아 공교육 부모 교육비 차별없는 공정한 나라

위성순 회장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 ❖ 만3-5세 유아교육 비용 정부 지원으로 완전 무상교육 확대 요청 유아 무상교육비 관련 법적 기준(유아교육법 제24조)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 만3-5세 유아교육·보육 이원화된 행정체계 교육부로 통합
- ❖ 규제 완화 및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 퇴로를 열어주어야 함

1. 유아 공교육화

-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부담금 전액 무상교육비로 지원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원동력은 국민에 대한 기초 교육이었다고 말함. 초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여 국민에게 교육 시켰던 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와 달리 전 생애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유아기의 교육에는 국가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며, 물론 재정의 문제였다고 봄
 - 이 시기를 사학 육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유아교육을 지켜왔지만 이제 정부가 만3-5세 유아 의무교육에 준하는 완전 무상교육 시행이라 생각함. 유아 무상교육은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예산을 확보하여 젊은 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
 -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관련 국가 예산만 225조가 넘고 지난해는 46조 6800억이라 함, 그럼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2명 수준으로 떨어졌음

- 교육부 2021년 자료에 의하면 공·사립 유치원의 원아 분담률은 공립 24%, 사립 76%임월별 평균 학부모 부담은 현재(2022년 3월) 공립유치원은 무상교육을 기실시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대다수의 유아 가정은 부모부담금이 약 214,925 원으로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가정에 비해 20배 가량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현실임,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저출산으로 인한젊은 부모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 따라서 저출산 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까 지 지원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절실히 필요함
-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인천형 만3~5세 유아 무상교육 2022년~2023년 단계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 만5세 전체 유아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함

2. 유아교육·보육 통합

- 이원화된 행정체계 교육부로 통합
 - 만3세~5세 동일연령의 유아가 다니는 법적인 유아교육 기관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부모들은 같은 교육기관으로 인식하여 교육의 질과는 상관없이 어디가 더 교육비가 낮은지, 높은지 선택기준이 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함
 - OECD 대부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복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들마저 보육이 아닌 교육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교육시스 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3. 규제 완화

- 비과세 대상인 학교에 세금 부과
 - 종전에 사립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지방세법상 초·중등학교와 동등 한 학교로 당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닌 비과세 대상이었음
 - 이후 2011년 12월에 「유아교육법」에 속한 유치원을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 이집과 함께 묶어 제19조로 옮기고 감면 시한을 2014.12.31.로 연장하고 「지방세

법」 감면대상으로 새롭게 규정(제272조 제5항)하고, 2014년 12월 31일에는 지방세 과세 특례를 제한하기 위해 177조의 2를 신설하면서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유치원 재산과 무관한 건물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은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되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 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부과되는 지방세 부과대상 기관으로 분류되어 하루 빨리 동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지방세법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에 미포함)

○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퇴로를 열어주어야 함

- 1989년 시행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 내 2,000세대에 설립 한 유치원은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어 아이가 없고 경영이 어려움에도 폐원을 할 수 없음, 이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폐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어야 함

4. 유아 공교육 방향

○ 제도적 방안

- 과거에는 국가·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교육을 통해 양성해야 한다고 보았다면 현재의 교육은 인적 자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한 삶을 스스로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자라도록 도와야 함, 따라서 유아교육도 유아, 학부모, 교사, 기관 모두가 스스로 행복한 삶과 경영을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자율성을 보장하되 책무성은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봄
- 유아교육 기관이 학교로서 공교육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완전 무상교육 실현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지원금 내용 및 체제를 사립 중·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형식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함
-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 설립이 허용되어 사립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소규모 유치원에는 적합하지 않아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폐원 시 정관에 법인 이전 재산(부지 시설 보존)은 설립자가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단서조항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새정부 육아 정책의 진일보를 기대하며...*

최은영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 새정부 육아정책 개관

- 20대 대통령 당선자(이하 윤 당선인)의 공약은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영유아기 교육·보육, 돌봄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본 토론문에서는 윤 당선인의 육아정책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고, 그 중 유아교육·보육 관련 정책 이슈들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20대 대통령 당선자 출산·육아 관련 공약

- 출산·육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모·태아·영유아까지 대상을 포괄하는 돌봄서비스의 확대, 난임치료,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이 확대되었고, 부모급여 도입이 포함됨.
- 부모급여의 도입은 현금지원 정책이 출생률(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김현숙, 정진화, 2019)1) 등 축적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고,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전반적인 비용지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본 토론문은 육아정책브리프 '새 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방향과 과제(발간 예정)'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¹⁾ 김현숙(2019). OECD 국가들의 출산율 결정요인: 가족친화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여성경제연구, 16(1), 27-50.

〈표 1〉 20대 대통령 당선자 출산·육아 관련 공약

구분	공약	세부 내용
출산·육아 지원	출산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급	- 부모급여 월 100만원 지원(0~12개월 부모 대상)
	육아휴직 부부합산 기간(2년→3년) 및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총 3년으로 연장 부모 육아 재택 적극 장력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를 위한 시간선택 근무제 확대실시, 육아기 근로자에게 우선 선택권 부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확대
		-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 -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건강과 돌봄서비스 확대	-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확대 -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역량 지원 강화 - 아이돌보미 이용 가족을 모든 영유아 및 초등학생 가족으로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사발달 검진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부모 자부담 정부 지원하여 양질의 민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돌봄	초등전일제 교육실시 및 초등돌봄 저녁 8시까지 확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확대로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하여 부모 부담 경감
	영유아,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통합 Al 플랫폼 구축	- 영유아,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자료: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 국에서 발췌하여 정리

□ 20대 대통령 당선자 유아교육·보육 관련 공약

- 유아교육과 보육 공통으로 해당하는 공약은 교사의 처우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이 포함됨.2)
- 보육 관련해서는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가 제시되었고, 유치원은 교육분야 공약

²⁾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면,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완화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만족도가 높았던 국공립 확충과 같은 유아교육·보육 관련 핵심 정책 이슈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임. 지난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 할 필요가 있음.

- 기타 공약으로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국가 조기개입 추진,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포함함.

〈표 2〉 20대 대통령 당선자 유아교육·보육 관련 공약

구분		공약	세부 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민간 어린이립,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 상향 -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 - 만3~5세 어린이집·유치원 안내·등록 국가책임제 강화 - 누리과정과 초등교육의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00170	공통 *	-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 어린이집·유치원의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끼 친환 경 무상급식' 지원	
유아교육· 보육 - - -			- 어린이집·유치원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으로 영유아 의 발달과 적응 지원	
	보육	- 영아반 교사 아동비율 축소	- 만0~2세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 - 긴급 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유아교육		-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 학습권 강화 -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	
	-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 -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 합전담법원 설치 - 아동인권을 우선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	
	-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 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기타	- 발달 지연·정애 영유이를 위한 국가 조기 개입 추진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서비스 제공 발달 지연·장애 영유아 조기개입 재활치료서비스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경계선 발달 지연 영유아 지원, 원스톱 즉시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 체계 강화	족 자녀의 맞춤형 지원 ^화	- 다문화가족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교육 및 돌봄 강화	

자료: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 국에서 발췌하여 정리

2.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주요 이슈들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 민간 의존도가 높은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교사의 처우는 유치원(국공립/사립), 어린이집(국공립/직장/민간 등) 내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윤 당선인은 민간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평균 급여에 관한 동일 시점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아 절대 비교가 어려운 상황으로 처우개선 수당의 지역별 차이 등을 고려하여 기관 간의 격차 외에 지역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이 설정되어야 함.

□ 어린이집·유치원의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윤 당선인은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의 단계적 통합을 제시하고,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첫 단계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계획함.
- 교사 자격 및 처우, 시설 기준, 재정, 거버넌스 등 유보통합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면, 통합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숙명일수 있으나 교사 자격, 재정등 유보통합의 민감하고,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통합이 우선 고려되어야함.

〈표 3〉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공약	세부 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
유보통합추진단 구성하여 단계적 유보통합 실시	-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의 단계적 통합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 비율 표준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 (첫 단계로)국공립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금을 인상하여 서비스 수준, 교사처우 수준,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 해소
만3~5세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안내·등록 국가책임제 강화	- 만3세 유아부터 국가적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등록 체계적 안내 - 만5세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준하는 안내 및 관리 강화

공약	세부 내용
	- 만3~5세 누리과정 교육내용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누리과정과 초등교육	- 누리과정 만5세 담당 유아·보육 교사의 초등교육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계 및 교사 역량 강화	연수과정 제공
	- 유아교육·보육과 초등교육을 연계하는 공동 지침과 매뉴얼 개발

자료: 국민의 항(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항 정책공약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p. 140.

□ 영아반 교사의 아동 비율 축소

- 윤 당선인은 영아반 교사의 아동비율 축소 공약의 세부 내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만 3세, 만 4~5세까지 단계적 하향을 제시함. 2021년 서울시는 교사 1명 당 아동 수를 '만0세 반'은 3명→2명, '만3세 반'은 15명→10명으로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범위와 방향, 규모를 결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3) 유치원도 학급당 유아 수조정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
- 유아교육·보육의 구조적 질 개선의 주요 요인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향후 영유아수 추이, 재정여건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중장기 과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표 4〉 영유아 친환경 급식 제공 및 영아반 교사의 아동비율 축소

공약	세부 내용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5만원)을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에 추가 지원 - 원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조식비와 석식비도 정부가 지원하여 '하루 세끼 친환경 무상급식'실현
만0~2세 영아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만0~2세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만0세 1:2, 만1세 1:4, 만2세 1:6)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개선 어린이집 만3~5세 단계적 하향 유치원 만3세 우선 하향, 만4~5세 단계적 하향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 개선	- 아동 1인당 보육면적 기준 확대(법률제정 이후 설립 어린이집 우선 적용, 기존 어린이집은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무이자 대출 등)을 통해 단계적 개선 - 공원어린이집 등 어린이집·유치원의 획기적 모델 추진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 긴급보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 시간제 보육반, 주말·야간 연장 보육반 운영 확대

지료: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p. 143.

³⁾ 내 손안에 서울 뉴스(2021. 4. 20). 보육교사 1명당 아동 수 줄인다…만3세반 15명→10명.

□ 영유아발달전문가 어린이집·유치원 파견

-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하고,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됨.
- 영유아발달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영유아발달전문가의 자격, 처우 등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표 5〉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 및 아동 건강관리 체계화

공약	세부 내용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유아발달전문가 파견하여 영유아의 발달과 적응 지원	제시되지 않음
영유아부터 아동기까지 건강검진 체계 고도화 및 아동 검진 의약품 비용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신체발달만 확인)과 아기수첩(예방접종)을 통합 기록하는 '레드북(출생이후 고교졸업시까지 건강검진 기록)'관리체계도입 - 건강검진 기록의 구체화, 체계화 및 여타 건강발달 상황과 연계한 피드백 제공 - 5세 미만 영유아의 약값 지원 및 발달 상담 무료 지원 - 예방적 접근에 기반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 의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액 수준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자료: 국민의 힘(2021).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짐-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p. 146.

3. 마치며...

-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생애초기 결정적 시기를 다루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은 정치적 변화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거듭되는 관성적 행위, 국가적 요구가 구호로만 반영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복잡한 정치적인 절충의 결과가 되어서도, 사회에서 유리한 경제적, 정치적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숙성된 담론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요구됨.

지정토론 8	
	유보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MEMO	

MEMO		

L						
		유희승	과장	(교육부	유아교육	-정책과)
МЕМО	 	 				

MEMO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